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익산시, 각종 지원사업 속도

정현을 익산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신속집행 진두지휘

도내 최초 관내 주소지 둔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사각지대·부정수급 문제 등 최소화...내달부터 지급

지급도시 군산시가 전북도 내 최초로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 모두에게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실행한다. 30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은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 사업, 기존 복지

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되는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물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고용산업위기 지역 군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며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총 16개 지원사업과 8개 분야,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세계 감염 대책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 마련과 신속 추진 과정을 정현을 시장이 직접 지휘하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와 도의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난 17일 곧바로 정현을 시장이 주재하는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익산시 코로나19 종합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조기집행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먼저 종합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경제소득 상실계층 지원, 소비촉진사업, 기타방역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했으며 즉시 시행 또는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미 소상공인·중소기업 통합 신고센터를 비롯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득

방역비, 방역장비 구입 등 긴급한 사업들은 긴급재난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즉각 대응하고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정부·전북도의 추경사업을 비롯해 익산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별 신청대상자를 미리 선별해 놓고 신청방법과 절차 간소화, 접수전용 창구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이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행정지원이 시급한 상태"라며 "예정된 지원사업들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모두 취해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집행하도록 하여 대시민 지원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비정규직 실직자 100명 단기일자리 공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일환으로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을 긴급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이나 학습교사, 보육실제사, 건설기계운전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긴급 수요 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 실직 후 1개월 경과한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나 공공요금 또는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등에 투입되어 1인당 월 180만원씩 약 3개월간 최대 54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가정이 수입단절로 흔들리지 않도록 추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 참고, 민원콜센터(1577-0022)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모색

마을전자상거래 연계 주문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개학연기로 인해 학교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30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어 학교급식 공급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고 있는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농가들은 생협 대비 10~3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들은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생산 농가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이제는 한결음 더 나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마을전자상거래와 연계하는 등 소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서동공원 정미도 주문했다.

정 시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무양투 분수대의 정상 가동 및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익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에 남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해당 사업의 미비점들을 잘 보완하여 익산시의 대표정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자연재난 대비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강임준 군산시장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 우려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재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방지 및 시설물 가동상태 확인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안전건설국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강임준 시장은 오희동과 송

창동지역 급경사지 및 소용동 배수펌프장 등 치례로 점검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난대비를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식목일 행사 취소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제75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취소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나무심기를 대체할 방침이다.

시는 목욕과 꽃씨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해 마을 공한지, 자투리땅 등에 나무를 심는 '화목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각 읍면동에서 총 21개소, 10.76km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해 6개소, 5.26km에 꽃씨 47kg과 철쭉 2,000주를 지원한다.

또한, 조사지 중 부지가 넓고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7개소를 확정해 생활권 작은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4월 소용동 동아아파트 옹벽길과 경안지구 연안정비 사업지 옆 자투리 땅부터 조성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쓰레기가 적치됐던 땅을 숲과 꽃길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착수

익산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따라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지원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4대 보험 사업장 부담분과 공공요금 납부조차 곤란함에 따라 익산시는 도비 포함 약 9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 중이다.

약 33억원이 투입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관내 소상공인 근로자 3,341명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대상자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개인별 우편 통지하여 신청받을 예정이다. 현재 심의 중인 예산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1인당 월 10만원정도의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